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상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시리아와 리비아 비교를 통해*

이종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2011년 발생한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으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은 무너졌으나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견재했다. 시리아의 시민혁명과 리비아의 시민혁명은 정권의 시위대에 대한 심각한 유혈 진압과 시위대의 무장, 내전으로의 비화 등에서 비슷한 전개 양상을 띠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보호책임(R2P)'에 따라 리비아에 대해서는 유엔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군사 개입을 하였으나 시리아 대해서는 결의안이 무산되고 군사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리비아는 외부세력의 군사 행동이 정권 붕괴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시리아는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비호 하에 외부세력의 군사 행동이 제지됨으로써 정권이 견재했다. 통상 독재정권이 붕괴하기 위해서는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커야 한다.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이 분열하지 않거나 분열 정도가 작으면 정권은 견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작아도 외부세력의 행동이 작용하면 독재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작아도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을 도우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고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을 도우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만약 일부의 외부세력은 저항세력을 돕고 일부의 외부세력은 지배세력을 돕는다면, 저항세력을 돕는 외부세력과 지배세력을 돕는 외부세력 중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강하냐에 따라 강한 쪽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아간다.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으로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이라는 '내생 변수' 외에 외부세력이라는 '외생 변수'가 유효함을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체제 이행, 독재정권, 외부세력, 외부세력의 영향, R2P

I. 서론

1. 문제제기

2011년 '아랍 시민혁명'의 여파로 리비아 정권은 붕괴하였지만 시리아 정권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2630).

건재하다. 리비아에서도 시민혁명이 발발하였고, 시리아에서도 시민혁명이 발발하였다. 정권의 강경한 진압과 대규모 유혈 학살로 인해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저항을 하기에 이르렀고, 사태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나아갔다. 결국 리비아 정권은 붕괴하였지만 시리아 정권은 반군과의 교전을 지속하며 건재한 상태다. 비슷한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달랐다. 어떤 요인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본 연구는 우선 이 점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일견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은, 한 곳은 외부세력이 개입을 했고 한 곳은 외부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리비아 시민혁명에 대해 국제 사회는 독재정권의 무력화(無力化)를 목표로 무력(武力) 개입했다. 그러나 시리아 시민혁명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가 개입하지 않았다. 결국 국제 사회의 무력 개입 여부가 결정적으로 다른 요인이 되어 다른 결과를 낳은 것일까. 이 점을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만약 그렇다고 확인된다면 이는 곧 독재정권의 붕괴와 관련 ‘외부세력’의 변수가 검증되는 것이다. 즉 독재정권이 붕괴하는데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 중에 외부세력의 행동이라는 요인이 변수로서 도출될 수 있으며, 그 유효성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외부세력의 행동이라는 변수는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 즉 독재정권이 붕괴하는가 혹은 유지되는가의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을 비교하여 외부세력의 행동이 독재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성을 도출하고, 일견 발견되는 다른 요인으로서 외부세력의 행동이 결정적 차이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관련 외부세력이라는 변수를 도출,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관련 ‘외부세력’이라는 변수의 유효

성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민혁명이 발발해 위기에 직면한 독재정권의 사례를 선정, 분석했다.

최근 독재정권의 이행 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중동 시민혁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 중에서 리비아와 시리아 사례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면서 결과는 상반된 상(象)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왜 같은 듯하면서 다른 결과를 보였는가. 여기서 그 결과의 상이성을 규정한 요소로서 외부세력의 영향력이라는 변수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유사성 속에서 상이성을 규명함으로써 그 상이성을 원인 변수로 설정하는 정성적 연구는 질적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다(Mill, 1936; Suchman, 1964; Przeworski and Teune, 1970; Lijphart, 1971; Merritt, 1971; 구갑우, 2003; 김웅진, 1993).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을 위한 ‘내생 변수’ 외에 ‘외생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중동 시민혁명 사례로서 ‘시리아 혁명’과 ‘리비아 혁명’을 그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외부세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하였는지를 주되게 살펴봄으로써 양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II.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 개념 및 분석틀과 가설

1. 체제 이행의 개념과 범위, 변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독재정권은 결국 3가지 양태로 나아간다.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민주화로 나아가는 경우, 혼란이 장기화하여 내전 상황으로 비화하는 경우 등이다(이종철, 2018). 독재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의 운명, 즉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는 결국 이 세 경우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의미상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이라고 하면 ‘민주화’로 치환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독재 정권의 체제 이행이 민주화를 모두 내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통상 민주화 과정은 민주화 이행과 민

주화 공고화 과정으로 구분되었다. 이행은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정부를 퇴장시키는 과정이다. 이어지는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태, 2006: 238-239). 이행기의 주된 과제는 독재자를 권력에서 퇴장시키는 것이며 공고화기에는 민주적 절차와 규범의 제도화, 내면화, 습관화, 일상화가 주된 과제가 된다(Diamond, 1996: 42; 김영태, 2006: 239).

본 연구에서 체제 이행은 현존하는 독재정권의 붕괴를 기준으로 한다. 적어도 현존하는 독재정권의 붕괴는 민주화로의 체제 이행의 전제 조건이자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독재체제가 종식한 후 새로운 민주체제가 수립되는 과정 역시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를 띠 수 있다. 독재정권 붕괴 후의 민주화 과정 역시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 독재정권이 붕괴하였지만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다. 설령 독재정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권이 민주적으로 성립된 후에도 민주화는 여전히 불안정성 속에 놓일 수 있다. 그럼에도 현존하는 독재정권의 붕괴, 현존하는 독재자의 실각은 민주화로의 체제 이행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다는 점 역시 이견이 없는 사실이다.

현존하는 독재정권의 건재 여부에 따라 이행 여부가 규정된다고 할 때, 앞서 밝힌 세 가지 경로 즉 독재정권의 향배에 관한 유지, 민주화, 혼란의 세 경우는 결국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시민들의 혁명이 발생하고 지배세력이 이에 굴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시민혁명을 억누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상황이 곧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의 순간이 된다. 여기서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이라는 변수가 도출이 된다. 이 양 변수의 상호 작용 혹은 역학관계는 '저항과 지배의 동학(動學)'으로 요약된다(이종철, 2018). 이 양 변수는 '내생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내부의 변수이기 때문이다. 국가 외적인 외생 변수를 제외하고도 이 동학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역대 대부분의 독재정권은 이 내생 변수의 역학관계 속에서 생멸(生滅)해 왔기 때문이다.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역학관계 즉 지배와 저항의 동학이라는 매커니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독재정권이 이행하는 데서 저항은 필수적이다. 전쟁이나 내부 쿠데타 등의 방법이 아니라면 저항세력의 저항이 있어야 독재정권의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은 것만으로 독재

정권이 이행하지는 않는다. 독재자가 권력의 포기를 결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독재정권의 이행이다. 독재자가 권력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지배세력의 분열이 수반된다. 즉 지배세력의 분열이 발생해야 독재자가 물러나는 상황이 가능하다. 통상 ‘이반’이나 ‘배신’으로 설명되듯이 총체적으로는 지배세력 내 분열이 전제가 된다. 지배세력이 분열하지 않는 조건에서 저항세력을 진압하고자 한다면 독재정권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은 높는데 지배세력의 분열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지배자가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동원 및 작동에 성공하여 유혈 진압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저항세력이 무장을 하고 저항에 나선다면,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무력 충돌도 빚어지는 혼란이나 ‘내전’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바로 여기까지가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동학이다(이종철, 2018). 이는 내생 변수에 국한된다.

선행연구(이종철, 2018)에서 설정한 것처럼, 지배세력의 움직임은 지배자의 의지,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혹은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등 그 여부를 통해 그 ‘분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저항세력의 움직임은 저항 주체, 저항세력의 네트워크와 대중 동원, 혁명 세력의 무장 등의 지표를 통해 그 ‘저항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수가 추가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것은 외생 변수인 ‘외부세력’이다. 즉 ‘외부세력의 개입’이다. 외부세력이 한 국가의 내부 ‘시민혁명’ 혹은 ‘혼란’ 상황에 개입하는 행태는 다양할 수 있다. 크게 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입장을 내거나 외교력을 발휘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무력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 무력 개입은 경우에 따라 ‘전쟁’이 되거나 ‘침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그 자체로 정당성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나마 전쟁은 중립적인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침략은 그 자체가 부당함과 부(不)정의(正義)를 내포하고 있다. 유엔은 주권불가침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국제법 위반이 된다(박동형, 2012: 293). 그러나 유엔이 출범한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유엔은 주권 개념의 확립을 넘어 인권 개념의 확립으로 나아갔다. 세계 도처에서 목격된 수많은 인도적 위기를 겪으면서 설령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은 동일한 것이기에 같은 인류로서의 인권에 대한 연대와 책임 의식을 자각하였으며 이를 행동으

로 실천할 방안을 확립하고 발전시켜 갔던 것이다. 이 결과물이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자)’ 원칙이다(박동형, 2012: 289-292). 즉 한 국가의 시민혁명이 혼란의 장기화 속에서 심각한 유형 사태로 격화되거나 내전 등의 물리적 충돌 상황으로 발전하여 독재자에 의한 시민의 희생이 극단적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 국제사회는 ‘R2P’에 근거해 무력 개입할 명분을 갖게 된다(이종철, 2018). 이 R2P는 합법적인, 직접적 무력 개입이 된다. 외생 변수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지점인 것이다.

2. 외생 변수로서의 ‘R2P’

보호책임 개념은 오랫동안 국제 사회의 논쟁 주제가 되어왔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동형, 2012: 289). 이 신화(2013)에 따르면, R2P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자 원칙으로서,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2001년 최초 대두 당시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로 국한되었던 R2P 범주가 2005년 유엔 만장일치를 통해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2011년 국제사회는 이 개념을 리비아에 적용해 무력사용을 실행에 옮겼다(Lee, 2013; 이종철, 2018: 33).

유엔 헌장은 ‘국내문제 불간섭(principle of non-intervention in domestic matters)’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사회의 무력사용은 자위(self-defense)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목적으로 국한하였다. 유엔 헌장이 제1조에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어느 한 주권 국가의 관할권 안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국제사회가 군사적 사용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비인도적 사태로서 1990년대 중후반에 발생한 두 사건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적 논쟁을 촉발시켰다(박동형, 2012: 289-290).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과 1999년 코소보에서 발생한 인종청소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

기된 것이다(조정현, 2011: 4).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99년과 2000년 유엔 총회에서 집단 학살(genocide)로부터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해결책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력히 촉구하였고, 캐나다 정부가 이에 호응하여 2000년 9월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를 설치, 인도적 목적의 개입과 주권에 관한 문제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심층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2011년 9월 ‘보호책임(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박동형, 2012: 290).

2005년 10월 유엔 총회는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를 결의 형태로 채택하였으며, 이 문서에 보호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었다(조정현, 2011: 4). 이 문서의 제138항에는 개별 국가가 ①집단학살(genocide), ② 전쟁범죄(war crime), ③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④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국제공동체는 각 국가들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유엔이 조기경보능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¹ 이후 2006년 4월 28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674호에서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의 보호책임 관련 조항을 재강조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²

이렇게 성립된 R2P는 수단 다르푸르 파견 PKO 임무 관련 결의안 1706호(2006), 1755호(2007), 1784호(2007)에서도 서문에서 인용되었으며, 이후 리비아 시민혁명 당시 전면적 군사 개입의 근거로서는 처음으로 인용되었다(조정현, 2011: 5). 리비아에서의 UN의 R2P 실행이 결국 리비아 독재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본다면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혹은 독재정권의 체제 유지와 관련 R2P는 새로운 변수이자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¹ “2005 World Summit Outcome,” UN Doc. A/Res/60/1(24 October 2005)(박동형, 2012: 292).

² UNSC Resolution 1674(2006), UN Doc. S/RES/1674(28 April 2006)(박동형, 2012: 192).

R2P를 다하기 위해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을 보호하고자 개입한다면 국내 지배세력은 결과적으로 저항세력과 외부세력의 협공 상황에 직면하여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부세력 중, 유엔 상임이사국인 주요 5 강대국 중 한 강대국이라도 지배세력을 도와서 R2P를 무력화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즉 안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R2P에 근거한 저항세력과 외부세력의 협공은 작동되기 어렵다. 이는 곧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의 편에서 무력을 사용하려 하는 것을 지배세력을 돕는 다른 외부세력이 저지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외부세력 중 강대국과 강대국 간의 대치 및 대립이 되면서 어느 일방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나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가름되는 상황이 된다(이종철, 2018).

3. 분석틀과 가설

이처럼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그리고 ‘외부세력의 지원 여부 및 그 방향’에 따라 독재정권의 이행 여부 및 양태와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어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도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작으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작아도 독재정권이 체제 이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저항세력과 지배세력 외 외부세력의 변수를 적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동학에 더해 외부세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수준이 낮아도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이 결정된다는 가정을 증명하고자 했다.

여기서 외부세력 변수는 더 깊이 들어가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을 돕는 경우,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을 돕는 경우,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을 돕는 세력과 저항세력을 돕는 세력으로 양분되는 경우다. 이를 통해 외부세력이 돕는 세력의 요구대로 나아간다고 할 때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에게

유리하면 독재정권은 유지될 것이며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에게 유리하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여 민주화로 나아갈 것이고, 외부세력이 양분되었을 때는 지배세력에게 유리한 외부세력의 작용이 더욱 강하면 독재정권은 유지될 것이고 저항세력에게 유리한 외부세력의 작용이 더욱 강하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여 민주화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같은 경우들을 종합하면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을 지원하느냐 혹은 저항세력을 지원하느냐 그리고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강한 쪽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아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작아도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H2: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을 도우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고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을 도우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

H3: 저항세력을 돕는 외부세력과 지배세력을 돕는 외부세력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 강한 쪽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아간다.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은 지표가 도출된다.

내생 변수로서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은, 저항 주체, 저항세력의 네트워크와 대중 동원, 혁명 세력의 무장 등을 측정 항목으로 하여 측정될 수 있다.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는 지배자의 의지,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혹은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등의 측정 항목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이종철, 2018).

외생 변수로서 외부세력의 작용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주변국의 움직임, 동맹국의 움직임, 대립국의 존재와 영향 등을 측정 항목으로 하여 측정될 수 있다. 특히 외생 변수에서는,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을 돕는 각각의 세력이 존재할 때는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느냐를 측정해야 한다.

표 1 독재정권 체제 이행 조건의 변수와 측정값

변수(지표)	측정값(측정 항목)	비고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저항 주체, 저항세력의 네트워크와 대중 동원, 혁명 세력의 무장 등	내생 변수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지배자의 의지,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혹은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등	
외부세력의 작용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주변국의 움직임, 동맹국의 움직임, 대립국의 존재와 영향 등	외생 변수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을 돕는 각각의 외부세력 중 어느 쪽이 더 강하나	

III.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

1. 시리아 시민혁명

시리아는 194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정권의 평균 수명이 1년이 안될 정도로 정정 불안이 계속되었다. 1970년 하페즈 알 아사드가 집권한 후 30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 갔다. 2000년 7월 하페즈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바샤르 알 아사드가 뒤를 이어 통치한다. 선거를 통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세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랍 시민혁명’으로 아랍 지역 국가들의 독재정권이 시민혁명에 굴복해 교체되던 당시 2011년 시리아에서도 시민혁명이 발발하였다. 시리아의 시민혁명은 결국 정권 퇴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정권의 탄압에 맞서 혁명 세력이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군과 혁명군 간의 내전 사태로 치달았으며, 혼란 상태가 지속하였다.

시리아 시민혁명은 2011년 3월 15일 수백 명의 군중이 남부 도시 다르아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초기 정세는 아사드 정권에게 대단히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철저한 탄압으로 대응하였고, 유혈 사태가 격화되면서 시위대가 무장을 하였고 사태는 내전으로 치달았다. 내전 역시 아사드 정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어

갔다. 양 진영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반정부 세력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내전 중 아사드는 선거를 치렀는데, 2014년 7월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88.7%의 지지를 획득해 재선에 성공하였다(김진하 외, 2016: 58-60).

시리아는 저항 주체, 저항세력의 네트워크와 대중 동원, 혁명 세력의 무장 등을 지표로 하여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을 검토했을 때 저항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배세력은 지배자의 의지,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혹은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등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지배자의 의지는 강했으며 지배자를 둘러싼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응집력 역시 강하게 나타났으며 지배자가 저항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를 동원 및 작동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즉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는 작게 측정되었다(이종철, 2018). 외부세력과 관련해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주변국의 움직임, 동맹국의 움직임, 대립국의 존재와 영향 등을 지표로 하여 볼 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시민군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시리아 정권을 비판하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 정권을 비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랍권에서는 이란이 러시아와 보조를 맞추어 시리아 정권을 두둔하였다. 이란은 같은 시아파 정권인 아사드 정권을 지킴으로써 대부분 수니파 정권이 장악한 아랍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같은 이란의 확장에 직접 반격을 가한 측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자신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 이란이 군사 역량을 확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였으며 시리아로 들어온 이란 군사 기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였다(한겨레신문 18/04/10; KBS 18/04/18; 연합뉴스 18/04/18). 주요한 것은 러시아의 강력한 후견이었다. 중요한 고비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비호함으로써 미국의 행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미국을 위시한 시민 세력에 우호적인 세력은 시민 세력이 아사드 정권을 타승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고 아사드 정권은 시민 세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견재하였으며 내전을 이어 갔다.

이 같은 역학관계 속에서, 시리아는 지배세력이 분열하지 않고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이행에 직면하였지만 결국 이행하지 않은 채 혼란으로 접어들었다.

표 2 시리아의 내생 변수(지표) 측정값(측정항목)의 결과

사례	변수(지표)	측정값(측정항목)	결과 1	결과 2	결과 3
시리아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저항 주체	형성	저항 수준 높음	체제 불이행 (혼란)
		저항세력의 네트워크 및 대중 동원	활발		
		혁명 세력의 무장	무장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지배자(독재자)의 의지	분명	분열 정도 작음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vs 응집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성공		

출처: 이종철(2021: 42)에서 일부 변용.

2. 리비아 시민혁명

리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51년 12월 리비아 연합왕국으로 출범하였다. 1969년 9월 1일 젊은 장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붕괴시키고 공화제 국가를 선포하였다. 당시 27세였던 카다피는 이후 42년 동안 철권통치자로 군림하며 통치를 이어 갔다.

2011년 아랍 시민혁명의 여파 속에서 리비아에서도 대중 시위가 발발하였다. 2월 15일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카다피는 곧바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2월 21일 카다피는 시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였으며 폭력 진압할 것을 선언하였다. 카다피는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을 감행하기도 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벵가지와 제3의 도시 미스라타를 장악하는 등 저항을 넓혀 갔다. 카다피는 이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이어 갔고 저항세력도 무장을 하면서 사태는 정부군과 시민군 간의 무력 충돌 형태로 나아갔다(이종철, 2014).

카다피의 정부군은 시민군을 격렬하게 몰아세웠고 시민군은 벵가지로 고립되는 수세적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3월 17일 유엔이 안보리 제재결의안 1973호를 채택하는 등 개입하면서 정세가 바뀌어 갔다. 밀고 밀리던 가운데 나토(NATO)를 중심으로 리비아 정부군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졌으며 전세는 역전되었다. 2011년 10월 20일 카다피는 숨어 있다 발각되어 우연한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로써 리비아 시민혁명은 혁명세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이종철, 2014).

표 3 리비아의 내생 변수(지표) 측정값(측정항목)의 결과

사례	변수(지표)	측정값(측정항목)	결과1	결과2	결과3
리비아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저항 주체	형성	저항 수준 높음	체제 이행
		저항세력의 네트워크 및 대중 동원	활발		
		혁명 세력의 무장	무장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지배자(독재자)의 의지	분명	분열 정도 작음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vs 응집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성공		

리비아는 저항 주체, 저항세력의 네트워크와 대중 동원, 혁명 세력의 무장 등을 지표로 하여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을 검토했을 때 저항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배세력은 지배자의 의지,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혹은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등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우선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지배자의 의지는 강하게 표출되었다. 지배자를 둘러싼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응집력은 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또 전개 양상이 일정 다르기는 하지만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배권력 집단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배자가 저항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를 동원 및 작동시키는 데도 성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는 작게 측정이 된다. 외부세력과 관련해서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주변국의 움직임, 동맹국의 움직임, 대립국의 존재와 영향 등을 지표로 하여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로 유엔의 개입이 성사되었고, 아랍권의 비우호적 태도 등 외부에서 카다피를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역학관계 속에서, 리비아는 지배세력이 분열하지 않고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이행에 직면하여 외부세력의 강력한 개입으로 결국 이행한다.

3.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 비교

시리아 시민혁명은 2011년 3월 15일 군중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유혈 사

태로 격화되고 시위대가 무장을 하면서 시위대와 정부군 간의 내전으로 비화하였다. 시리아 독재정권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내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독재정권은 건재했다.

리비아 시민혁명은 2011년 2월 15일 군중의 시위가 시발점이 되었으며 집권자인 카다피는 시위대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폭력 진압할 것을 명령하였다. 저항세력이 무장을 하면서 시위대와 정부군 간의 내전으로 비화하였고 저항세력은 정부군에 밀려 고립되는 수세적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결국 리비아 정권은 붕괴하였다.

저항 주체, 저항세력의 네트워크와 대중 동원, 혁명 세력의 무장 등을 지표로 하여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을 검토했을 때 시리아에서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같은 지표로 볼 때 리비아에서의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지배자의 의지,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이반 혹은 응집,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등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시리아에서,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지배자의 의지는 강했으며 지배자를 둘러싼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응집력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지배자가 저항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를 동원 및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시리아에서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는 작게 나타났다. 같은 지표로 볼 때 리비아에서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 역시 작게 나타났다. 우선 저항에 굴복하지 않고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지배자의 의지는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지배자를 둘러싼 지배연합 내 지배엘리트의 응집력 역시 지배자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배권력 집단에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지배자가 저항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를 동원 및 작동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이상과 같이 내생 변수에서 시리아와 리비아는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항세력의 수준과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유사하게 측정되며, 독재자가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시위대를 유혈 탄압하며 군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는 등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리아는 독재자가 건재하였지만 리비아는 결국 독재자가 권좌를 잃고 도피해야 했다. 어떤 차이가 이 같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것은 결국 외생 변수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생 변수

로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IV. 시리아와 리비아에 대한 외부세력의 행동

앞서 보았듯이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은 비슷한 양태를 보이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리아 시민혁명은 결국 성공하지 못해 내전 상태로 나아갔으며 정권이 건재한 가운데 내전이 지속하고 있다. 반면 리비아 시민혁명은 성공했다. 리비아 정권은 결국 붕괴하였다. 두 사례는 많은 점이 비슷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존재했다. 변수는 외부세력의 행동이었다.

1. 시리아에 대한 외부세력의 행동

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정부군의 강경 진압으로 민간인 학살 사태 발생하자 2011년 8월 미국 등 서방권은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였다. 아랍연맹은 시리아에 대해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였다. 2012년 2월 유엔 총회는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 결의안을 채택했다(인남식, 2019: 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퇴진을 거부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아사드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호책임’에 입각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논의했다. 이는 학살을 중지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무력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으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011년 10월 4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의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하고 4개국이 기권하였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함에 따라 결국 부결되고 만다(UN Doc. S/2011/612<4 October 2011>; 김형준, 2012: 3).

이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와 군사 개입을 위한 결의안은 논의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1년 이후 아사드 정권의 국제법 혹은 국제합의 위반, 책임성, 민간인 보호 위반, 특히 동부 알레포 집중 포격, 화학무기 사용 등 국제 안보 위협에 관한 시리아 관련 12개 결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정은숙, 2019: 83). 결국 2019년까

지 안보리는 시리아 폭력에 대한 제재안을 전혀 채택하지 못했다. 2015년 처음으로 시리아 정치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채택했지만, ‘시리아인 소유의 정치 과정이어야 한다’든가, ‘주권과 영토 전일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등 의례적 결의가 됐다.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피하다 보니 나온 결과였다(정은숙, 2019: 27-28).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뜻을 비쳤으나 결국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3년에는 자신이 설정한 임계점(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공언했다(뉴스1 18/03/16). 하지만 오바마는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미적댔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중앙일보 13/06/06). 2013년 8월 21일 수도 다마스쿠스 동부 자말카 등지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학 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1,400여 명을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공언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인남식, 2014: 3). 이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응징’ 대신 러시아가 제시한 시리아 화학 무기 제거 계획에 합의했고, 시리아는 러시아의 중용으로 그동안 거부해 왔던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비로소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 무기 사용은 중단되지 않았다. 급기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을 감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의 극악무도한 행동이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이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을 펼쳤다(뉴스1 17/04/05).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은 2018년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행동은 시리아 정권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데 그쳤으며 궁극적으로 아사드 정권의 행태를 바꾸지 못했고 내전의 향배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시리아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도 시리아 정권의 향배에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의 시민혁명이 유혈 사태로 치닫고 시리아 정부군에 의한 민간이 학살 사태가 발생하자 아랍연맹은 시리아에 대한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등 시리아 정권에 차가운 여론을 형성하였지만 이란은 시리아 정권의 비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랍 국가들 대다수가 수니파 정권이었던 데 비해 시아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란의 시아파 정권은 같은 시아파 정권이었던 아사드 정권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강봉구(2016)에 따르면 이란에게는 다음의 3가지 목적이 있었다. 이란은 시리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들이 시아파 정권을 전복하고 권력을 잡음으로써 수니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 아사드 정권 유지를 통해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을 지원하고 안정화하고자 했다. 이라크가 이슬람 근본주의 수니파로 구성된 ISIS와 같은 테러집단의 근거지가 되는 것이 이란으로서는 위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사드 정권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반서방 ‘저항의 축’을 유지하고 수니파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되었다.

이 같은 이란의 확장을 이스라엘은 좌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자 이를 직접 타승하는 무력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에서 비대칭 전투를 위한 독립적인 기지를 구축하려 하며 이를 시리아가 협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하며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정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동안 러시아가 이란의 기지 건설을 막을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 시리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겨레신문 18/04/10; KBS 18/04/18; 연합뉴스 18/04/18). 이 같은 주변국의 대처로 인해 즉 동맹국과 대립국이 얽히고설키는 관계를 만듦으로써 시리아 내전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시리아 정권은 시민혁명의 명분을 희석하며 체제 유지를 위한 용이한 국면을 만들어 갔다.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약 2,000만 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되었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2년 4월 14일 2042호 결의문에서 2018년 12월 13일 2449호 결의문에 이르기까지 16회에 걸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중 아사드 정권을 직접 압박하고 제재하는 결의는 전혀 없었다. 앞서도 밝혔듯이 시리아 정권을 압박하는 수준의 논의는 러시아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부되었기 때문이다(정은숙, 2019: 78-84).

미국은 러시아의 반발에 강경하게 나아가지도 못했으며 시리아 문제의 주도권은 점점 러시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일명 ‘아스

타나 프로세스'로 구체화되었다. 러시아는 2017년 1월 아스타나에서 시리아 정부의 바샤르 자파리 대표를 만나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이 회의는 러시아가 주관하고 터키와 이란이 후원을 맡았다. 기존 논의가 유엔이 주도하며 아랍연맹이 후원했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시리아 안정화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2019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Nur-Sultan, 아스타나의 개명된 지명) 회의까지 총 10차례 개최된 아스타나 프로세스는 구체성을 띠어 갔다. 2025년까지 아스타나 프로세스를 통해 헌법 제정, 권력 분할, 완충지대 설정, 포로 교환 및 소수 민족 자치권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사실상이 같은 계획은 시리아 내 갈등선의 복잡화와 쿠르드 문제 및 터키의 개입 그리고 러시아의 거대 전략이 얽히면서 그 전망이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력으로서 러시아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인남식, 2019: 25-27).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의 퇴진이 아닌 시리아 정권을 중심에 두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구상을 진행시키며 시리아 정권을 지속적으로 비호하는 한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압박은 더욱 요원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리비아에 대한 외부세력의 행동

리비아에서 시민혁명이 발발하고 정부군의 발포와 유혈 진압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심각해지는 등 사태가 격화하자 국제사회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다. 2011년 2월 2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제재결의안 19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 이 결의안에는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카디피와 그 자녀 그리고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 금지와 해외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카다피의 탄압과 폭력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결의를 포함하였다(박종철 외, 2011).

리비아 결의안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였다.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의안을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국은 초기에는 ICC 회부 내용을 반대하였지만 결국 찬성한다. 미국도 소극적이었지만 찬성한다.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 사태를 회부하자 ICC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였다(박동형, 2012: 294-299).

이 같은 결의안에도 카디피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역설하게 된다. 프랑스와 영국은 군사 개입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3월 1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973호를 채택한다. 결의안은 “국민 보호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입각하여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하였으며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UN Doc. S/RES/1973<17 March 2011>; 박동형, 2012: 296).

이 결의안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결의안이 통과된 후 3월 19일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973호는 자신들의 정부에 의해 자행된 폭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는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civilians)을 완수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2000년대 이후 UN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보호책임 논리가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Ki-moon Ban, 2011; 박동형, 2012: 296; 조정현, 2011: 2).

결의안에 따라 3월 19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국적군의 공습이 이루어졌다. 나토군은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카다피 정부군과 주요 시설을 타격하였다. 이 같은 외부세력의 물리적 개입은 카다피 정권과 정부군이 패퇴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당초 결의안 1973호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랍국연맹의 압력을 받아 결국 기권으로 선회하였고 이로써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을 막지는 않았지만 비난과 비판을 계속하였다. 중국은 1973호 결의안이 통과된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양 유(Jiang Yu)가 “중국은 리비아의 최근 사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곳에 대한 군사 공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중국 정부외교문서 2011; 백태열, 2014: 272-273)고 말하는 등 관영 언론매체를 통해 비난을 지속하였다. 러시아도 나토의 무차별 공습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며, 결의안이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면서 나토의 공습이 목적을 벗어났음을 강조하였다(정부문서 번호 378-20-03-2011; 백태열, 2014: 271-272). 중국과 러시아는 이처럼 반대와 비난을 이어 갔지만 이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결국 리비아 사태에서는 궁극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개입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3. 시리아와 리비아에 대한 외부세력의 행동 비교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은 비슷하게 전개되었지만 결국 다른 결과를 낳았다. 시리아에서도 정부군의 유혈 진압에 시위대가 무장을 하고 저항하기에 이르렀으며 시민혁명은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으로 비화하였다. 리비아도 마찬가지였다. 리비아의 시위대도 정부군의 유혈 진압에 무장을 하고 저항하기에 이르렀고 내전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시리아는 내전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권이 건재했지만 리비아는 정권이 무너졌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세력의 행동이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리비아 정권에 대해서는 보호책임이 발동되었지만 시리아 정권에 대해서는 발동되지 못했다. 리비아에 대해서는 보호책임에 근거한 군사 개입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채택이 되었지만 시리아에 대해서는 거부되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러시아다. 러시아가 주도를 하는 가운데 중국이 행동을 같이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리비아에 대해서는 기권을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리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분명하게 행사함으로써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은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내생 변수는 유사했지만, 외부세력이라는 외생 변수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앞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성립이 될 수 있다.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수준이 작아도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가 결정되었다(H1). 또한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고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지 않고 유지되었다(H2). 더 깊게는, 시리아의 경우 저항세력을 돕는 외부세력과 지배세력을 돕는 외부세력 중 지배세력에게 유리한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저항세력에게 유리한 외부세력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리비아는 저항세력에게 유리한 외부세력의 영향력이 지배세력에게 유리한 외부세력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H3).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이 전개되고 도달한 결말을 통해 독재정

권의 체제 이행 조건에는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이라는 내생적 변수뿐 아니라 외부세력이라는 외생적 변수가 같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유사성 속에 차이성을 보이는 두 사례를 통해 외부세력이라는 변수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2011년 ‘아랍 시민혁명’의 여파로 리비아에서도 시민혁명이 발발하였으며 독재정권이 결국 붕괴하였다. 같은 시기 시리아에서도 시민혁명이 발발하였으나 독재정권은 붕괴하지 않았다. 리비아에서 시민혁명이 발발하고 전개된 양상은 시리아와 유사했다. 정권은 시민들의 시위에 무력 진압을 감행하였다. 정권의 강경한 진압에 시민들의 대규모 희생이 야기되었고 시위대는 결국 무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은 내전으로 치달았다. 리비아의 독재정권과 시리아의 독재정권은 ‘반군’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대립은 격화되었으며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리비아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대량 학살이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입각해 군사 개입을 논의하였으며, 전격 개입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군사 개입은 리비아 독재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으며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놓았고 결국 시민군이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시리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보호책임에 입각한 군사 개입을 논의한다. 하지만 개입은 성사되지 못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반대는 결국 유엔이 보호책임에 입각해 시리아 독재정권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다. 러시아의 비호는 시리아 정권이 유지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통상 독재정권이 붕괴하느냐 유지되느냐는 시민혁명이 발발할 당시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독재정권이 붕괴에 직면하려면 우선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배세력이 분열하여야 한다.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지 않은데 독재정권이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다고 독재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재정권 즉 독재자를 포함한 지배세력이 분열하지 않고 결집하여 저항세력

을 억압한다면, 더욱이 군과 경찰 등 물리적 통제기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다면 저항세력의 저항이 아무리 격렬하게 전개되어도 시민혁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클 때 독재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반대로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지배세력이 분열하지 않거나 분열 정도가 작다면 독재자는 결국 시위대를 억압하고 진압하여 권좌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도 독재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은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다. 외부세력이 개입해 독재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앞서 밝힌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의 역학관계라는 내생 변수 외에 외부세력의 행동이라는 외생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역학관계를 리비아 시민혁명과 시리아 시민혁명을 통해 검토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리비아 시민혁명과 시리아 시민혁명은 유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한 쪽은 정권이 붕괴하였고 한 쪽은 건재하다. 어떤 요인의 차이가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인가. 여기서 그 차이를 만든 요인은 외부세력의 행동이었다.

본 연구는 시리아 시민혁명과 리비아 시민혁명을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저항세력의 저항 수준이 높고 지배세력의 분열 정도가 작아도 외부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H1). 둘째, 외부세력이 저항세력을 도우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고 외부세력이 지배세력을 도우면 독재정권은 체제 이행하지 않고 유지된다(H2). 셋째, 저항세력을 돕는 외부세력과 지배세력을 돕는 외부세력 중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 강한 쪽의 요구대로 결과가 나아간다(H3). 아울러 이 같은 가설 검증을 통해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여부 즉 독재정권이 붕괴하는가 혹은 유지되는가의 조건으로 저항세력과 지배세력이라는 내생 변수 외에 외부세력이라는 외생 변수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투고일: 2021년 9월 14일 | 심사일: 2022년 5월 26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참고문헌

- 강봉구. 2016.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 시리아 내전 개입 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15-16.
- 구갑우. 2003.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북한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 김영태. 2006.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제1호, 237-285.
- 김용진. 1993. 『비교정치연구의 논리』, 전예원.
- 김진하·한승수·백우열. 2016.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통일연구원.
- 김형준. 2012. “리비아 시민혁명과 유엔 보호책임(R2P)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형. 2012.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87-312.
- 박종철·박영호·박형중·정영태·조민·홍우택. 2011. 『재스민 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통일연구원.
- 백태열. 2014. “리비아 사태에 대한 NATO의 군사적 개입: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입장 비교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265-294.
- 이종철. 2014. 『국제관계의 이해: 멈추지 않는 전쟁과 테러』, 박북.
- _____. 2018.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에 관한 연구: 북한, 동독, 이집트, 시리아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1. “독재정권의 체제 이행 조건과 상이성.” 『국방연구』 제64권 제1호, 29-57.
- 인남식. 2014. “시리아 사태의 최근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1-5.
- _____. 2019. “시리아 안정화 프로세스: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함의와 전망.” 정책연구시리즈 2019-13.
- 정은숙. 2019. 『시리아 내전 미국·러시아 군사개입과 갈등』, 세종정책총서 2019-6.
- 조정현. 2011. “리비아 사태와 국제법: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1-15.
- Diamond, Larry. 1996. “Is the Third Wave Over?” *Journal of Democracy* 7, 20-37.
- Gareth Evans and Mohamed Sahnoun.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 (Ottawa, ON, 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2001).
- Lee, Shin-wha. 2013.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fter Libya: Practical Implication for North Korea." 『국제관계연구』 18권 1호, 5-37.
- Lijphart, Arend.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3), 682-693.
- Merritt, Richard. 1971. *Systematic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o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l, John Stuart. 1936. *A System of Logic*. London: Longmans.
- Przeworski, Adam and Henry Teune.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 Suchman, A. E. 1964. "The Comparative Method in Social Research." *Rural Sociology* 29(2), 123-137.
- "2005 World Summit Outcome," UN Doc. A/Res/60/1(24 October 2005).
- Ki-moon Ban. "Remarks to meeting on Libya." UN News Service(19 March 2011). <https://www.un.org/sg/en/content/sg/speeches/2011-03-19/remarks-meeting-libya>(검색일: 2021. 2. 10.).
- UN Doc. S/2011/612(4 October 2011)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un-documents/document/syria-s2011-612.php>(검색일: 2021. 2. 10.).
- UN Doc. S/RES/1973(17 March 2011) <https://www.securitycouncilreport.org/un-documents/document/libya-s-res-1973.php>(검색일: 2021. 2. 10.).
- UNSC Resolution 1674 (2006), UN Doc. S/RES/1674(28 April 2006).
- 정부문서 번호 378-20-03-2011 <https://www.mid.ru/ru/home>(검색일: 2021. 2. 10).
- 중국 정부외교문서 <http://www.fmprc.gov.cn> 2011. 3. 20.(검색일: 2021. 2. 10).
- 박승희. 2018. "[8년 접어든 내전]③시리아 내전 주요 사건 일지." 『뉴스1』(3월 16일).
- 유영준. 2018. "시리아 본게임은 이란-이스라엘?" 『연합뉴스』(4월 18일).
- 이본영. 2018. "이스라엘-이란, 시리아 끼고 정면충돌하나." 『한겨레신문』(4월 10일).
- 이지예. 2017. "트럼프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는 오바바 탓"." 『뉴스1』(4월 5일).
- 한경환. 2013. "시리아 화학무기 방관 앞뺏다더니...미적대는 미국." 『중앙일보』(6월 6일).
- 허술지. 2018. "이스라엘, 이란에 '시리아 내 기지 타격 준비' 경고" 『KBS』(4월 18일).

Abstract

The Influence of External Forces in the Dictatorship's Regime Transition: A Comparison between Syria and Libya

Jong Chel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yrian civil revolution and the Libyan civil revolution in 2011 overthrew Gaddafi's regime in Libya, but Assad's regime in Syria surviv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yrian civil revolution and the Libyan civil revolution had a similar development pattern in the regime's severe bloody suppression on the protesters, the arming of the protesters, and the escalation into civil war. The difference is that the UN adopted a resolution and pursued military intervention in Libya according to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but the resolution was rejected, and no military action was taken in Syria. In Libya, the military actions of external forces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collapse of the regime, and in Syria, the regime survived by restraining the military actions of external forces under the protection of a power such as Russia. Usually, in order for a dictatorship to collapse the resistance level of the resistance forces must be high and the degree of division of the ruling forces must be large. Even if the resistance level of the resistance forces is high, if the ruling forces are not divided or the degree of division is small, the regime is highly likely to survive. However, even if the resistance level of the resistance forces is high and the degree of division of the ruling forces is small, if the actions of external forces operate, the dictatorship can collapse. Even if the resistance level of the resistance forces is high and the degree of division of the ruling

forces is small, the influence of external forces can determine whether the dictatorship will be changed. In other words, when external forces help the resistance forces, the dictatorship is changed, and when external forces help the ruling forces, the dictatorship is maintained without regime transition. If some external forces help the resistance forces and some external forces help the ruling forces, depending on which of the external forces helping the resistance forces and the external forces that help the ruling forces is stronger, the result goe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stronger side. It can be confirmed by comparing the Syrian civil revolution and the Libyan civil revolution that the 'exogenous variable' of external forces in addition to the 'endogenous variables' such as resistance forces and ruling forces are valid as a condition for transition of the dictatorship.

Keywords | regime transition, dictatorship, external forces, influence of external forces,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